
 금융위원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font-weight: bold;">보 도 자 료</div>				 금융감독원
	보도	배포시	배포	2019.1.29(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02-2100-2830)	담 당 자	황 기 정 사무관 (02-2100-2832) 김 경 호 사무관 (02-2100-2836)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손 주 형(02-2100-2860)		송 희 경 사무관 (02-2100-2862) 박 석 훈 사무관 (02-2100-2864)
	금융위 중소기업금융과장 홍 성 기(02-2100-2950)		김 태 훈 사무관 (02-2100-2991)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변 제 호(02-2100-2610)		박 보 라 사무관 (02-2100-2614)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이 한 진(02-2100-2620)		송 현 지 사무관 (02-2100-2621)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3145-8020)		정 미 선 팀 장 (02-3145-8045)

제 목 : 김용범 부위원장,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1.29일(화), 「자영업자 금융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
- '18.12.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19.1.29(화)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15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중소기업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데이터과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 김용범 부위원장은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18.12.20일)하였으며,
- 이와 관련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고 언급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주요 내용

- ①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관리 및 특정업종 편중 현상 완화
 -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 쏠림현상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 지정 → 한도 관리
- ② (맞춤형 지원 강화) 자영업자 전용 저금리 금융상품을 마련하고, 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1.8조원), 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출시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활용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6,000억원)
 - 은행·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확대, CB·카드사 빅데이터 컨설팅 허용
- ③ (채무조정·재기지원 활성화)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 ④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주요 공공정보, 카드매출액·가맹점 관련 정보를 CB사 및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

- 또한,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고 언급하며,
-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1.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 ☐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을 증가율이 높고,
 -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9말,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 업종별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 ☐ 또한,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임대업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 특정업종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잠재적 위험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 ☐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하여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
- ☐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임대업대출을 점검한 결과,
 - 최근의 부동산·임대업대출 증가세는 상가·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규제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
- ☐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은 ①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②은퇴 연령층(베이비붐세대)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 제2금융권에도 RTI를 예정대로 도입('19.1분기)해야 하며,
 - 부동산·임대업 대출로의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관리('19.1분기)해야 한다고 강조

2.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 김용범 부위원장은 1.31일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언급

* 초저금리 대출상품 1.8조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원

※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예정

- 이와 관련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 특히, 상품출시 직후 고객문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3.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출시

-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하여 총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라 언급

*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 1,200억원,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억원(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 특히,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

* 보증비율 90~100%(일반 보증 85%), 보증요율 0.3~1%p 인하(일반 보증 평균 1.5%)

- 또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이 2월중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 ☐ 한편,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 이를 위해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 금융법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하여
 -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
- ☐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고,
 -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경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를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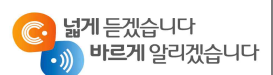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1.31일 발표 예정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1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① 자영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사업체 관련 정보 포함)를 CB사 및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추진

※ 공공데이터 공개·활성화 차원에서 국세청·행안부·복지부 등과 협의중

- ② 카드매출액,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금융회사 여신심사, CB사 신용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카드사-금융회사간 협약사업 확대,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허용 등

2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1.28일 기준 1.92%)를 적용한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기은, 1.8조원)

- ② 장래 카드매출액을 추정*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마련(기은, 2,000억원)

*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카드대금을 바탕으로 카드매출액 산출

- ③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500억원)하여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자금지원(지원규모 6,000억원)

- ④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i) 은행이 고객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자체 선정하고, 유관기관(소진공, 서울신보)이 컨설팅 제공('18.12월)

ii)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사전(대출신청시)·사후 컨설팅 확대

iii) CB사·카드사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를 허용(신정법 개정필요)

3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① 자영업자 등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채무조정 사각지대 최소화

- (연체 우려 차주)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연체 발생전 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 (연체중인 차주) 정상 경제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을 대폭 확대(‘17년 29% → ‘22년 목표 45%)
- (변제능력 상실 차주) 일정기간(예 : 3년)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

②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상태 자영업자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 재창업자금지원 패키지" 마련

- 신복위 채무조정(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후 미소금융상품 연계 또는 신·기보 보증상품 제공

③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마련

* 연대보증채무 보유자의 경우 자영업 창업 등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움

- 캠프에서 금융회사, 금융위·중기부 산하 정책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 연대보증채권 매입 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

* (대상)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 채무액 30억원 이하, (채무감면) 최대 60%

4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①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점검

②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관리대상 업종 지정 통한 한도관리, RTI 운영상황 점검 등)